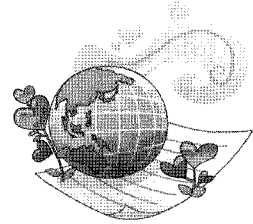


IT무대를 세계로



우리나라 IT산업의 경쟁 무대를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IT CEO 글로벌화 프로그램 운영, 패키지형 해외진출 추진체계 구축, 세계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 우선 지원, 글로벌 IT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식경제부가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6.25(금) 제2차 'IT정책 자문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산업 글로벌화 전략(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 IT산업과 정책을 이끌어온 14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IT산업 글로벌화 전략(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IT산업 글로벌화 전략'은 이날 회의 결과 및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8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SW, 방송·네트워크 장비 등이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은 기술력 부족도 있었지만 협소한 국내시장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IT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세계시장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토의과제로 발표한 전략(안)을 통해 ▲IT산업 글로벌 마인드 확산, ▲패키지 해외진출 추진체계 구축, ▲IT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핵심전략을 제시하

였다.

먼저, IT산업 글로벌 마인드 확산이다. IT산업 글로벌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CTO·CEO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IT CEO 글로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개교 예정인 주요 외국 대학과 협의하여 'IT CEO 글로벌화 MBA 단기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해외진출 관계부처와 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을 망라한 (가칭) 'IT 해외진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IT 세계시장 개척 유공자를 매월 발굴하여 '이달의 글로벌 IT CEO賞'을 수여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 패키지 해외진출 추진체계 구축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방송·네트워크 장비 등의 패키지형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발굴, 전략국가 선정, 정부간 협의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국가의 IT인재와 정책결정자 등을 국내 IT분야 학위과정에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靑韓

인맥을 확보하는 한편, 유·무상 공적원조 프로그램을 활용한 우리 IT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IT 수출 경쟁력 강화이다. 정부의 R&D사업 추진시 연구기획 단계부터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자 선정시 해외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기업과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대형 융복합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당 총 투자비 최대 3,000억원 규모, 기간 5~7년이다. 또한, 대기업의 브랜드 및 해외 영업망을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한편, 해외의 글로벌 IT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의 마케팅 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30억 신흥시장의 진출전략을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소장 : 정기영)는 '10.6.23(수) 「경제위기 이후 신흥국 부상의 시장기회와 한·중·일 3국의 정책대응」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움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의 공장'이던 BRICs 등 "G20" 신흥국들이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한국 지식경제부,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등 동북아 3국의 실물경제 주관부처 국장급 정책당국자들이 모여 경제위기 이후 국가별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관심을 유도한 것이다.

일본(사다모리 케이수케 경산성 통상교섭관)은 향후 대외경제정책으로 신흥시장 타게팅, 일본의 대외개방성 증대, 글로벌 경제협력 Framework 강화를 제시하였다.

현지특성에 맞는 진출전략 수립, 'Made in Japan' 브랜드 유지,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녹색인프라·시스템 수출 등이 신흥시장 타게팅이다. 개방성 증대로는 인적자원·금융·지식의 일본유입 촉진, 기업하기 좋은 일본 조성, 지식기반 경제로의 환경 조성 등이다. 프레임워크 강화는 FTA확대, APEC2010 성공적 개최이다.

중국(천저우 주한중국대사관 경제상무공사)은 거시경제 조절능력 제고, 민간소비 확대, 경제구조 선진화, 균형발전 등 향후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한중 FTA, 한중일FTA 추진 등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 위기이후 중국의 정책방향

-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조절능력 제고
- 민간소비 촉진과 사회전체 안정적인 투자 실현
- 신에너지·선진제조업 등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경제구조 선진화
- 도농간 조화로운 발전 및 농촌·농업의 발전 추진
- 과교흥국(科教興國) 전략 및 인재 강국 전략 추진
- FTA 추진, 도하라운드 협정 적극 참여 등 개방 확대

한국(박청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은 융합신산업 육성, IT경쟁력 강화, 녹색성장 등 한국경제의 성장활력 창출 전략을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재편에 대비한 신흥시장 진출지원 강화, FTA확대 등 적극적인 대외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유망시장·품목, 신흥시장의 유형별 특징 분석등을 통해 신흥시장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 KEM 30의 지역별 분포 】

아시아(11개국)	동유럽(6개국)	중남미(4개국)	중동(5개국)	아프리카(4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터키,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SERI 선정 30대 유망 신흥국(정호성 SERI 수석연구원)을 살펴보면, 신흥국 내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이 용이하고,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30개의 전략 신흥국인 “KEM30(Key Emerging Markets 30)”을 선정·발표하였다.

유망 수출품목과 인프라 시장(SERI 김정우 수석연구원)에 대해서, 신흥국 수입품목 260개에 대한 시장 매력도를 분석, 유망 수출품목을 도출하였다.

수출유망품목으로 휴대폰, 승용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비료, 의약품 등이고, 중소기업 유망품목으로 의류, 음료, 농기계 등이다.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고속철도, 원자력, 수처리 통합솔루션, 차세대이동통신의 4대 인프라 품목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심 필요한 것이다.

신흥국 거대유망소비시장(SERI 이동훈 수석연구원)에 관해서, 신흥국 소비시장의 특성으로 ①10대와 20대가 절반이 넘고 총인구가 45억명인 젊고 거대한 시장, ②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확산, ③의식주중심의 기초소비에서 통신, 교육, 의료 등 선택적 소비의 증가가 지목된 것이다.

그러나 BRICs 등 일부 선발신흥국을 제외하면 개별 국가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동질성이 높은 거대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신흥국 진출의 키워드와 대응전략(SERI 복득규 연구전문위원)에 대해서, 신흥국 연구센터 및 전문가 양

성을 통해 신흥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초국경 거대시장과 차세대시장의 선점 등 한국만의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특화전략이 제시되었다.

사양산업 재할성화와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국내 고용과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신흥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공존공영의 전략이 필요하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한·중·일 산업협력의 틀을 만들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소재(일본)-부품(한국)-완제품(중국)-제3국 수출로 이어지던 생산자 중심의 동북아 분업 협력관계에서 한중일 FTA시대에 대비한 역내교류 확대로 협력의 포커스를 맞추는 한편,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한중일간 공동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